




6월항쟁 기념 학술대토론회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한가?

글 · 김혜진 leedy1211@kdemo.or.kr

사진 · 황석선 stonesok@kdemo.or.kr



사업회 연구소는 지난달 9일(월)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회 양극화와 불평 등,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6월민주항쟁 21돌 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어느덧 6월항쟁을 기념하는 학술발표회는 연구소의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해왔지만 이번에는 남다른 측면을 갖고 있었다. 한 달여 시간을 거침없이 몰아쳐온 촛불집회의 모태 시청광장을 내려다보며 ‘역사가 된 1987년 6월과 역사가 될 2008년 6월’ 이 교차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소 특별한 흥분과 긴장감을 뒤로한 채 함세웅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본격적인 발표가 시작되었다. 이번 기획은 지난 1997년 이후 급격하게 악화된 한국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분야별로 진단함으로써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성장, 분배, 정책

첫 번째 <경제양극화와 민주주의>란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 이정우 교수(경북대)는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지표로 ‘저성장과 양극화’ 를 지목했다. 그 원인으로는 다른 모든 가치를 배제한 채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성장지상주의’ 에 주목한다. 맹목적인 ‘성장지상주의’ 는 국가 간 비교연구로도 그 낙후성이 뚜렷한 ‘영세한 복지’ 와 ‘비대환 자영업’ 구조를 만들어 냈고, 사회경제영역의 ‘민주주의의 결여와 노동배제’ 는 양극화의 최대난제인 ‘방대한 비정규직 문제’ 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향후 한국사회의 국가 발전방향은 ‘성장과 분배의 조화, 복지국가의 건설’ 을 통한 ‘저성장과 양극화’ 의 해소여야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미한 ‘복지예산의 확대’ 와 ‘대기업-중소기업 사이 민주적 관계의 회복’, 기업 내 ‘분배개선을 위한 노조의 발언권 제고, 기업민주주의의 달성’ 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오 교수(명지대)는 <선진적 사회정책의 미래를 위하여>란 발표에서 보다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청하는데, ‘과거의 야만적 발전국가’ 에서 ‘미래의 윤리적 사회국가’ 로의 체제전환이 그것이다. 과거와 같은 ‘대량생산-대량소비-고(高)오염’ 으로부터 미래의 ‘신성장정책’ 은 ‘소량생산-소량소비-저(低)오염’ 의 방식으로, 과거의 ‘고성장-고소득-고조세-고복지’ 를 대체할 ‘저성장 하에서의 고복지’ 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지구적 차원의 무한경쟁에서 무한성장이 불가능해진 오늘날, 소유와 소비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생활패턴의 출현을 요청하며, 궁극적으로는 ‘지구적 차원의 윤리적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의 구축을 이상적 방향으로 제시했다.

경제와 노동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 들어가 제 1세션 <경제와 노동> 분야의 발표가 있었다. 먼저 <친기업주의와 한국경제>란 발표에서 홍중학 교수(경원대)는 한국처럼 시장 내 공정한 규칙이 집행되지 못하는 경제적 민주화 수준이 낮은 조건에서 추진되는 친기업정책은 재벌의 시장 왜곡현상을 교정하기 어렵게 함으로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즉 친기업주의가 모방하려는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대처정부의 감세,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정책 등이 제시될 당시 영미상황은 한국과 달리 시장의 규칙을 엄정히 집행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세나 규제완화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충분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와 유사한 조건은 오히려 1920년대 미국의 후버리즘으로 볼 수 있고 당시 추진된 감세, 규제완화, 작은정부론은 극심한 부의 집중과 대공황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토론에 임한 임원혁 박사(한국개발연구원)의 지적처럼 대공황의 원인 분석과 구체적인 대안 등에 검토가 더 필요하지만, 공정한 시장 작동을 전제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친기업정책이 초래할 양극화와 부의 집중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위기의 가능성은 공유될 수 있었다.

한편 <노동의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과제>를 발표한 이병훈 교수(중앙대)는 노동양극화의 핵심 원인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등장한 대기업의 초단기적 수익관리중심의 기업 활동방식에 따른 '수익독식기제(squeeze-up mechanism)'를 지목했다. 나아가 민주정부들의 시장규율과 성장우선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노동조합운동의 '단한' 실천관행, 시민사회운동의 사회적 시민권(노동과 복지)에 대한 문제인식결여 등이 결합되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아닌 '민생민주주의'로 가는 '제 2의 사회경제적 민주개혁'을 위해서는 보이는 손(국가)의 독단에 맞서 철저적 정치민주주의를 성숙시켜 온 적극적 시민역량이 보이지 않는 손(시장)의 전횡에 따른 사회분배의 실패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기반으로 전환-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박태주 박사(한국노동교육원)는 작금의 사회경제적 사태의 표상을 '비정규직'이라고 강조한 후, 고용배제적 성장구조에서 복지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며 '고용진략'이 문제해결의 핵심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만의 과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인지하여 노동-사회적 동맹을, 나아가 정당세력의 결합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생경제와 생활정치

제 2세션은 <민생경제와 생활정치>란 주제로 먼저 '주거불평등과 욕망의 정치'가 발표되



었다. 변창흠 교수(세종대)는 지난 총선을 실현될 수 없는 욕망에 의존한 욕망의 정치로 평가하게 한 뉴타운 이슈를 출발로 하여 한국 부동산문제를 검토했다. 발표에 의하면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부족,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부족, 부동산을 통한 사회 양극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확대 등의 현황을 고려할 때 새 정부의 개발공사 민영화, 토지이용규제 완화, 주거복지정책의 축소 등은 주거불평등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람직한 방향은 부동산의 공공성을 살리는 것으로 과도한 개발과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철저한 이익환수장치를 마련하고, 1가구 1주택주의로 주거안정을 실현하되,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김용창 교수(서울대)는 부동산과 금융의 결합 등 최근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변화들을 주목하며 그 파국이 미칠 사회적 영향력을 우려하는 한편, ‘공공성’이나 ‘공익’의 개념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응, ‘사유재산권’ 정의의 재정립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사교육과 교육불평등〉을 발표한 김호기 교수(연세대)에 따르면, 교육격차는 사회양극화(소득격차)와 지역격차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사회양극화→교육격차→사회 양극화 강화’라는 악순환이 강화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따라서 사회민주화의 기본조건인 교육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양극화 해소란 차원과 교육안전망 강화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종업 교수(한신대)는 교육문제는 주택문제와 하나의 세트이며,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과거 사회통합의 주요매개체였던 배경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할 때 더더욱 인내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고, 대학서열구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차별보상구조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문화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와 환경

제 3세션인 <복지와 환경> 분야 역시 두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문진영 교수(서강대)는 '새로운 사회위험의 등장과 복지정책의 방향' 이란 발표에서 한국사회는 이미 21세기형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되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분출하고 있지만, 20세기 복지국가의 핵심원칙인 '국민기본선(the principle of national minimum)' 마저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산업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건설(old risks, old welfare)과 동시에 후기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사회대응 모델의 구상과 실천(new risks, new welfare)을 동시에 실천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권, 건강권, 주거권, 교육권 등의 사회적 기본권 확립을 기본적 제도 구성으로 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체제(welfare)와 근로복지(workfare), 교육복지(learnfare)가 세워져 있는 기본적 사회투자 국가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자인 김영환 교수(성공회대)는 사회투자국가는 아직 논쟁점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중산층이 하락하는 것을 저지하는데 주력하는 것은 소극적인 목표설정 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성장기반은 적고 복지과제는 산적한 현실에서 정책우선순위 설정의 난제, 노동운동이 미약한 조건에서 복지동맹구축의 어려움 등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고민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친환경시대의 신개발주의' 에서 조명래 교수(단국대)는 새 정부의 한국사회비전의 구현물을 747공약이라 할 때, 그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내세운 한반도 대운하는 '신개발주의 권력이 헤게모니화를 실현하는 프로젝트' 라고 평가했다. 인수위의 국정과제 핵심내용 역시 신자유주의 시대에 부응하여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투자를 늘림으로써 지대추구형의 토건성장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와 개발주의가 합쳐지는 신개발주의가 관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생태환경보전의제는 2개로 불과 1%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 21세기 발전의 대안으로 간주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새 정부의 국가발전 비전과 콘텐츠는 퇴행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최병두 교수(대구대)는 자본주의는 노동, 자연에 대한 탈취로 축적을

이루어 왔고 한국사회의 경우 최근에 성장이 약화되면서 참여정부는 지역균형을 내세우며, 새 정부는 시장주의를 내세우며 자연에 대한 탈취를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태의 결과는 결국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

마지막으로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정해구 기념사업회 연구소장의 사회로 앞선 세션의 분야별 발표자들과 박순성 교수(동국대), 조희연 교수(성공회대), 손석춘 원장(새로운사회를연는연구소)이 참여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진로모색에 여러 가지 고민을 공유했다.

먼저 조희연 교수는 1987년 이후를 ‘민주주의(시민권)와 자본주의(양극화)의 전쟁상태’로 표현하며 민주주의의 확장으로 사회적, 공적 규율장치를 마련하려는 흐름과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침식하지 않도록 저지하려는 흐름이 1997년을 기점으로 후자의 우위로 재편되었다고 진단했다. 향후 과제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제언은 국민대중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는 보수 세력의 우경화를 지적하며 ‘보수의 중도화’를 강조했다. 이어 박순성 교수는 이른바 ‘민주블럭 해체’ 또는 ‘임무종료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며,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계급정치론의 인식을 확장하는 문제, 정당정치-운동정치 혹은 대의제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의 결합의 문제, 이를 위한 지식인운동(씽크탱크허브 등)의 활성화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손석춘 원장은 촛불집회의 비판적 역량이 기존 정당을 대안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과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성찰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개혁이나 진보를 지향한 세력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모호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 앞선 발표자들 역시 오늘의 현실과 미래의 진단에 있어 의견을 나누었는데,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에 있어서는 미약하나마 낙관론과 조심스러우나 매우 심각한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었다. 물론 발표자와 참석자 모두 낙관론이라 해서 한국민주주의가 처한 녹록치 않은 구조적 조건을 경시하지 않고 있음을, 비관론이라 해서 인간의 선택과 행위가 만들어갈 창조적 잠재력을 간과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다. 희망의 빛과 회의의 칼날이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데 유용하게 작동하길 기대하며 토론회를 마치는 박수에 힘을 보탤다.